

민주, 구하라법·감사원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21대 거부권 폐기된 법안 4개 “노란봉투법 등 7월 회기 처리”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추가논의 “18일 본회의 개최, 당 공식입장”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쟁점 법안 7개를 당론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론 채택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감사원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7개다.

이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노동자의 실질적 원정을 규정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서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

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의무를 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확대하고, 우선매수권 실효성을 강화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보호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가맹지역분부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감사위를 통한 내부통제, 국회를 통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박선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지시 받았을 때 직무 집행을 곧바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기 채택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가장 빠른 시점인 18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8월 국회도 7월 국회에 이어 바로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국회의장과 여당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성운 “민주 지도부서尹 무도함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성운(전북 전주시울·사진) 의원이 11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함에 '맞짱' 뜨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3~4일에 한 번꼴로 민생토론회를 열어 총선용 선심 정책을 남발했다"며 "관권선거라는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수도권은 15차례, 영남권은 4차례 진행한 것과 달리 호남권에서는 단 한 차례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남권 민생토론회를 당장 개최하지 않으면 행사가 진정성 없는 총



선용 관권 선거였음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최근 국제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제청장이 5·18을 폄훼한 것에 대한 논란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강 서울국제청장이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치켜세운 것도 모자라 5·18을 '광주사태'라는 용어를 사용해 폄훼했다"며 "윤 대통령은 5·18을 폄훼한 강민수 국제청장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호남권 민생토론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 “교섭단체 요건 완화·공동교섭단체 검토”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1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공동교섭단체 구성 등 두 가지를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향후 정치개혁 과제를 통해 교섭단체(구성 요건 완화) 문제를 추진할 생각"이라며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은 유신의 잔재고 작은 정당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교섭단체 완화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공동교섭단체 구성도 고민을 해야 한다"며 "두 개 방식을 모두 고민하고 있고 연말까지 차근차근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4·10 총선에 비해 의석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현행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충족하지 못해 상임위 간



사 등을 두지 못하고 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국회법 개정 사안이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조력이 필수하다.

민주당의 협력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교섭단체 구성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6당은 조국혁신당 12석, 개혁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을 보유해 총 21석이 된다.

조 전 대표는 공동교섭단체 구성 방식에 대해 "어느 정당과 같이 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덩치만 키우기 위해 모든 다른 사람을 모아서 할 경우 분란만 날 수 있어서 민주당을 뺀 야6당이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정책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준호 “반값 소형 전기차 법안 대표 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사진)은 11일 전기차 차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판매가격 각 차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출시된 캐스퍼 EV, 기아 EV3 등 신형 전기차 중에서는 '캐스퍼 EV'만이 전장, 전고, 전폭 기준을 모두 충족해 소형 전기차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광주 GGM에서 생산



된 '캐스퍼 EV'를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수요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캐스퍼 EV의 출고가격은 3149만원(세제혜택 전·옵션 제외)으로 책정됐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보조금 900만원에 추가적으로 50% 보조금이 더해져 총 13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1000만원대' 반값 전기차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소형 전기차에 대한 수요 진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나토 정상 리셉션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리셉션에 각국 정상들과 함께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여야, 임성근 사단장 무혐의 처분 놓고 공방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보고 야 “사건 몸통 대통령 부부” 여 “수사결과, 정략적 왜곡”

여야는 11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 결정할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고, 임 전 해병대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야당은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공신력 있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야당이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근거 없는 모욕 등으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하고 사기저하는 물론 여론을 왜곡해



김철문(왼쪽)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뉴시스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군 사망사고는 무겁고 정밀하게 다뤄야 함에도 당시 박정호 단장은 단 열흘 만에 모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했다"며 "경찰은 1년여에 가까운 심층조사로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 피의자를 입건한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위성민 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사단장은 수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썰려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는데 경찰은 군사교범 상 꼼꼼하고 면밀한 수색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며 "경

찰청의 수사 결과를 보면 마치 문해력 테스트의 오답지를 보는 것 같다"고 꼬아붙였다. 그는 "이 사건을 보면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나서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께서 격노하셨다고 하고, 경찰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불송치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강변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작전통제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임성근이 이 부대를 파견했다고 부하에 영향력이 없느냐"며 "(수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사건 당시 'VIP'를 얘기하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운 듯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범의 녹취 등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이 전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고 있다"며 "반드시 그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의원도 "채해병 순직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실의 외압"이라며 "작년 7월 31일 안보실 회의 때 대통령의 격노 그리고 직후로 추정되는 이종섭 장관에게 걸려온 02-800-7070 전화 그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